

## 동북아 안보 환경과 평화 정착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박원근\*\*

### 논문초록

경제 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불안정하다. 역내 핵심 국가로 귀환 (return)한 중국과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차원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역내 19세기 수준의 영토 갈등도 만연하다.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분석과 해결책이 국제정치학계에서 제시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성찰은 제한된다. 동 논문은 우선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배타적 민족주의, 군비경쟁, 영토분쟁, 북한 핵문제,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에 대한 기독교 성찰을 담은 해결책으로 첫째 배타적 민족주의의 완화를 제시한다. 예수님의 사역 목표가 편협하게 정의되는 민족적 이해를 넘어서는 전 인류의 구원이므로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하되 이를 극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체 구성의 노력도 중요하다. 동북아의 다자체제 구성은 “신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국가 주권보다 우선시되므로 평화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되 기독교적 성찰을 담은 정전론의 원칙에 따라 핵역제 전략을 입안하는 한편,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 결국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국제관계 지성의 끊임없는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주제어 : 동북아, 안보, 북한 핵, 민족주의, 영토분쟁

---

\* 동 논문은 2015년 12월 17일 개최된 제49회 한반도평화연구원(KPI) 평화포럼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동글로벌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교수  
2016년 7월 5일 접수, 8월 5일 최종수정, 8월 23일 게재확정

## I. 서론

동북아<sup>1)</sup>는 냉전이 끝난 25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에 있다. 동북아에는 인구, 영토, 경제, 군사력 등으로 국력을 평가할 때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로 분류되는 중국과, 이와 경쟁이 가능한 강대국으로 인식되는 일본이 위치하고 있고, 비록 탈냉전으로 세계 초강대국 위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강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있다. 군사력만을 따로 놓고 판단한다면 2015년 군사비 지출 세계 2위 중국, 4위 러시아, 8위 일본, 10위 한국과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도 동북아에 위치한다(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Fact Sheet, 2016). 경제 측면에서 볼 때 2015년을 기준으로 GDP 규모 세계 2위인 중국, 3위인 일본, 11위인 한국, 12위인 러시아가 동북아에 위치한다. 이들 국가의 GDP를 합치면 17조 5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 73조 1천 7백억 달러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대 경제권이다(World Bank, 2016).

동북아 지역은 경제·통상을 비롯한 비안보 분야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제1무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맺었고, 한중일을 모두 포함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무역 순위를 한국 중심으로 보면 중국의 4대 무역국, 일본의 3대 무역국이다(한국무역협회, 2015). 이와 같이 동북아는 1978년 개방을 선택한 이래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전후 성공적으로 복구하여 2010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일본,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을 단기에 이룩한 한국, 막대한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 등이 양자 또는 다자간 경제 의존을 심화시켜 왔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재난, 환경·기후, 에너지, 수자원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 서로간의 갈등과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

---

1) 동북아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지리적 위치를 따르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대만, 극동러시아(시베리아) 등이 포함된다(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1999: 248). 그러나 역사적·경제적·군사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동북아 핵심 국가로 간주한다. 미국의 경우 지리상 동북아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한국과 일본에 군사력을 진진배치하고 역사·정치적으로 민감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관계 및 의제 측면에서 분석할 때 역내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고자 한다.

한다는 주장(Mosseu, 2013)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이른 바 ‘아시아 패러독스’가 존재한다(박근혜, 2013).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이 심화되지만, 안보 측면에서 불안정과 갈등 양상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이 중국과 일본 관계를 1차 세계대전 이전 활발한 경제교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으로 치달은 영국과 독일관계로 비유하면서 더욱 불거졌다(New York Times, 2014).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와 그레이엄 엘리슨(Graham T. Allison) 등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Tirone and Donahue, 2014; Allison 2014).

동북아 역내 상황을 보면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역내 양자간 국가 관계가 편치 않다. 국가간 외교·안보 이해의 충돌이 쉽게 발견되고 보다 근원적 차원의 역사 인식도 간격이 크다. 19세기적 영토 갈등의 양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보 차원을 넘어서 세계정치·외교에 영향을 주는 핵무기가 북한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도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동북아는 이해와 협력 대신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한다(하영선, 2015). 부연하면 동북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비안보 분야의 협력이 심화·확대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유럽이 성공적으로 이룩한 민족 중심의 근대국가 형성을 아직도 성취하지 못하였고,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주의 경험 등의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으며,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남북 분단과 북한 핵 문제 등이 산재해 있어 21세기 통합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북아에 만연한 갈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성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919년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사를 막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국제정치학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동북아의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정치 담론은 기독교 세계관을 배제한 체 국가의 물질적·단기적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신]현실주의 패러다임이 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시도는 제한된다. 그나마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는 전쟁의 정당성과 관련된 정당전쟁론[정전론]과 평화주의 또는 이를 절충하는 시도이다. 후술하겠지만,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초기 기독교 사상가에 의해 시작되었고, 현대에는 도덕·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해석과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박원곤, 2016;

Baer, 2015; Allen, 2014; Regan, 2013; Patterson, 2007; Holmes, 2005; 신원하, 2003). 현대에 들어 정당전쟁론은 기독교자인 폴 램지(Paul Ramsey, 1968), 정치윤리학자인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1997, 2004) 등에 의해 주도되고, 평화주의는 신학자인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 1994)가 체계화하였다. 이들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근원적인 논쟁을 성경적·윤리적 측면에서 지속하면서 현대 전쟁의 중요한 의제인 핵억제, 선제공격, 인도주의적 개입, 예방전쟁 등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시기와 영역, 대상은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에 국한되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에서 시작되어 21세기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정당성 논의가 주된 연구 대상과 시기이다. 정전론과 평화주의를 동북아의 안보 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적용할 여지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구체화한 연구는 부재하다.

동 논문과 연계된 국제정치학의 주제 중 기독교 세계관과 성찰을 담은 연구는 더욱 제한된다. 폴 마샬(Paul Marshall, 1997: 227-264), 로널드 사이더(Ronald J. Sider, 2012: 181-190) 등이 동 논문이 주목하는 국제정치 현상인 민족주의, 국가간 모형, 국제기구를 통한 통합 등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전체 저서 분량 중 10분의 1정도만 할애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을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사회에만 부분적으로 접목하여 설명하였다. 스티브 몬스마(Steve Monsma, 2008)는 국제정치 의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적용 가능한 정의, 통합 등과 같은 의제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시도하였고, 짐 윌리스(Jim Wallis, 2005)는 선지자 미가의 사례를 통해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상 보다는 원인에 대한 해결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도 국제정치학의 일부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지만, 직접적인 연계성은 미약하고 특히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외에도 벤덜카 쿠바코바(Vendulka Kubalkova, 2000), 미카 루오마-아호(Mika Luoma-aho, 2012) 등이 국제정치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합하는 연구를 시도하였지만,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신학적 측면에서 현 국제정치학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종합할 때 기독교 관점에서 국제정치학을 다룬 선행 연구는 정당한 전쟁과 관련된 논의를 제외하고는 깊이 있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동북아 상황과 관련하여 기독교 성찰을 시도한 연구는 더욱 더 제한된다.

이와 같이 국제정치에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 노력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신학적 관점에 따른 학문 영역에서 분석의 상이성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이 전제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을 기반으로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이 그리스도인 삶의 기반과 믿음의 최종 권위,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파 등을 믿는 복음주의에 기초한다(Operation World, 2016).<sup>2)</sup> 동 논문에서 시도하는 기독교 성찰은 복음주의 기독교 사회학자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James Davison Hunter)의 접근법에 동의한다. 헌터(Hunter, 2010: 16-17)는 인간을 “하나님의 의도와 자신의 본성에 의해 세상을 만드는 자(world-maker)”로 창조하셨다고 전제한다. 이후 인간들은 자신들이 발전시킨 기술, 학문, 제도 등을 통해 개인적·집단적 운명을 실현한다. 이런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번성케 하려는 그분의 계획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관여하고 세상을 형성하고 나온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부연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개별적·집단적·사적·공적인”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본 논문이 추구하는 기독교적 성찰은 국제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번성케 하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특정한 상황과 영역에서 나타나는 갈등적 현상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안정과 평화를 위한 조건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 현상을 배타적 민족주의, 군비경쟁, 영토분쟁, 북한 핵문제,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후 역내 갈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완화, 역내 평화협력 공동체 구성, 북한 핵억제 및 비핵화 등을 제시하되 각각의 방안에 기독교 성찰을 담고자 한다.

2) 복음주의도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보수적 복음주의, 진보적 복음주의, 급진적 좌파 복음주의, 신우파 근본주의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보다 높이 구현”하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신원하, 2003: 101-129). 기독교 성찰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제정치학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하여 재평가하는 작업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다양한 복음주의가 공유하는 공통된 목표에 기반하여 논의를 우선 진행하고 신학적 관점에 따른 세분화된 접목은 향후 지식이 축적된 상황에서 시도해야 할 것이다.

## II. 동북아 역내 갈등

### 1. 배타적 민족주의

동북아 국가 사이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인한 불신이 깊이 남아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보다는 이를 왜곡·미화하려는 일부 일본 내각의 행태로 인하여 역내 국가 양자 또는 다자간의 미래를 지향하는 건설적 관계 구축을 저해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주요 정치인의 태평양 전쟁 전범을 안치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등은 2차 세계대전 후 끝없는 자기반성을 통해 주변국과 화해하고 신뢰를 이룬 독일과 대비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 행보는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 2013년 12월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 참사를 참배함으로써 주변국의 비난을 불러왔다. 또한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침략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아직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정의되지 않았다”고 사실상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여 미국 언론에서도 “수정주의”(Washington Post, 2013)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Wall Street Journal, 2013)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러한 아베 신조 내각의 행태는 역내 각국의 민족주의 발흥과 연계되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 중 동북아에는 국내정치 지지를 위한 국수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강화 민족주의’(state strengthening nationalism)가 만연하여 국가 간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킨다(Breully, 2014: 389).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는 영토에 대한 타협 절대 불가, 역사 문제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이어진다.

일본 민족은 “관용의 민족”이라는 전제<sup>3)</sup>하에 아베 신조 내각이 추구하는 전쟁할 수

---

3) 아베 신조 총리가 2006년 저술한 『아름다운 나라』에 따르면 “일본인은 예로부터 도덕을 중요시하는 민족”이고 “관용의 정신”을 갖고 있으며 “설령 국가와 국가가 마찰을 일으켜도, 상대국의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친절하게, 성실하게 응대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어진다(아베 신조, 2006: 155; 김준섭, 2015: 68에서 재인용).

있는 나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보통 국가화,’ 중국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중화주의를 재천명하고 나선 ‘중국의 꿈,’ 북한의 한민족 순혈주의에 기반한 ‘우리 민족끼리’ 등 역내 모든 국가가 배타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외교·안보정책에서 국수주의 성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독도,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등의 일본 연계 사안, 중국의 동북 공정 등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우선되어 어떠한 전향적 정책 제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배타적 민족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역은 영토 문제이다. 국가강화 민족주의는 한일간의 독도/다케시마, 중일간의 닌오위다오/센카쿠, 일러간의 쿠릴열도, 미중 갈등으로 번진 남중국해 문제 등의 영토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므로 이성적·합리적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가간의 무력 충돌로 악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Zakaria, 2008). 따라서 현재 동북아는 과거가 미래를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내부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관계 발전을 제어하고 있다(동북아 평화협력 구상팀, 2014: 39).

## 2. 군비 경쟁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동북아의 대표적 안보 갈등은 군비 경쟁의 격화이다.

순위	국가명	군사비(단위: 10억 달러)	GDP 대비(%)
1	미국	596.0	3.9
2	중국	215.0	1.9
3	사우디아라비아	87.2	13.7
4	러시아	66.4	5.4
5	영국	55.5	2.0
6	인도	51.3	2.3
7	프랑스	50.9	2.1
8	일본	40.9	1.0
9	독일	39.4	1.2
10	한국	36.4	2.6

출처: SIPRI 2016 Fact Sheet(for 2015)

〈표1〉 2015년 세계 10대 군사비 지출 국가 주요 통계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군사비 지출 국가 중 동북아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4개국이나 된다. 이들 국가의 군사비를 합칠 경우 3,587억 달러로 전 세계 추산 군사비 총액 1조6천7억 달러의 4분의 1 수준이다.

막대한 군사비 사용과 더불어 동북아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또 다른 현상은 역내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공격용 무기이다. 공격용 무기는 방어용 무기보다 무력 분쟁의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 현대전에서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구분이 쉽지 않지만, 명확한 공격용 무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대표적 공격무기이다. 현재 중국은 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고 2척을 건조하고 있다. 항공모함은 자국 방어의 목표를 넘어서 타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때 사용되는 무기체계로서 보통 항공모함과 수송함, 이지스함, 잠수함 등으로 전단을 구성하고 약 40대의 각종 함재기를 탑재한다. 중국이 실제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자국을 벗어나 적어도 동북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항모 건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미 태평양 전쟁에서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한 바 있는 일본도 2015년 3월 27,000톤 경 항공모함 급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이즈모’와 8월 19,500톤급 ‘가가’를 진수하였다(News Japan, March 26, 2015). 두 함정 모두 일본이 도입을 확정된 F-35B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항모 건조에 대항하는 공격용 무기체계 도입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은 전통적인 안보 딜레마에 따른 악순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안보 딜레마는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비록 다른 국가를 공격할 의도가 없더라도 타국에게 위협으로 전달되어 이에 대응하게 되는 국제정치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Jervis, 1978: 167-174). 중국의 항모 건조가 비록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더라도, 혹은 역으로 일본의 대형 구축함이 중국의 해군 투사 능력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진수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국은 상대방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서로를 견제하는 군비경쟁에 빠져드는 것이다.

안보 딜레마에 따른 군비경쟁은 한반도에서도 심각하다. 북한은 약 14,100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5,500문은 2012년 연평 포격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사포이다(국방백서, 2014: 25-26). 방사포를 포함한 진진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미사일과 함께 한국에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하영선 편, 2014: 70-76). 북한은 주력포인 사정거리 65km의 240mm 방사포를 세배 이상의 사정거리와 GPS를 정착한 300mm 방사포로 성능을 개선하여 이르면 2016년 말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있다(VOA, 2016.4.6.). 이에 대항하여 한국도 타격 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도입 및 배치하고 있다. 서북 5도를 방어하기 위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이 배치되어 수차례 해상 사격 훈련을 하였고(KBS News, 2016.6.15), 순항 미사일인 현무-3A, B, C를 배치하고 있으며(국민일보, 2015.7.30), 한미의 미사일 협정 개정에 따라 2015년 6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에 성공한 후(연합뉴스, 2015.6.30), 800km 탄도 미사일도 거의 개발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VOA, 2015.9.12). 이와 같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도입되는 무기의 성격과 사용 목적 및 체계 상 보다 공격적이고 강력한 파괴력, 정확도, 장거리 타격 능력 등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 3. 영토 분쟁

동북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안보 현안은 영토 분쟁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20세기 두 번의 세계 전쟁을 치른 후 영토 갈등에서 벗어난 것과는 달리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전쟁을 치른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역대 가장 심각한 분쟁으로 남아 있고, 남중국해, 센카쿠/다오위다오, 독도, 쿠릴열도, 대만 독립 등 영토 갈등이 산재해 있다.

2016년 역대 영토 분쟁 중 갈등이 가장 격화되고 있는 곳은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이다. 난사군도는 약 100여개의 소도, 사주, 환초, 암초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면 위로 도출된 총 면적은 약 2.1km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이 10개, 대만 1개, 베트남 24개, 말레이시아 6개, 필리핀 7개 등 브루나이까지 합쳐 총 6개국이 해수면상, 해수면하 또는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난사군도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실제 당사국간의 교전이 발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88년 베트남군이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난사군도의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 상륙하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낳았다(김태호, 2015: 87-88). 또한 중국은 난사군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난사군도 여러 곳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12해리 영해를 선포하자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군함

을 12해리 이내로 파견하는 자유항행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2015년 10월, 2016년 1월과 5월에 실시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The Diplomat, 2016.6.7).

센카쿠/다오위다오도 일본과 중국이라는 동북아 역내 두 강대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토 갈등으로서 향후 무력 충돌을 포함한 중일 간의 갈등이 본격화된다면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센카쿠/다오위다오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400km, 중국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에 위치한 총 면적 6.4km<sup>2</sup>의 8개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고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김태호, 2015: 145). 중국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 청국이 다오위다오를 지배했고, 일본이 전쟁을 통해 이를 개명하여 센카쿠제도로 편입했다고 반발하는 반면 일본은 1895년 이후 만국공법에 따라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이명찬, 2013: 95). 중일 갈등은 2012년 9월 일본이 사유지였던 센카쿠 지역 3개의 섬을 국유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를 비난하고 중국내에서 반일 시위가 격화되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중국 정부는 다오위다오 해역 인근에서 “동해협력 작전”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하도형, 2013: 144-145).

#### 4. 북한 핵 개발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상황 중 하나는 북한의 핵개발이다. 핵무기는 국제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 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한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동시에 핵무기 보유 자체가 지역 내 권력 역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핵무기의 비확산은 세계 정치적 의제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상임이사국의 핵보유가 완료된 후 1968년 ‘핵무기비확산협약’(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을 체결하여 핵 확산을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990년대 핵개발 사실이 밝혀진 후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두 차례 등 총 다섯 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 동북아, 세계안보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우선 북한 정권의 속성상 핵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일인 지배 체제하의 북한이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할 경우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되어

북한 정권 자체가 궤멸될 수 있지만, 많은 전쟁이 상대방에 대한 오인, 강경한 주장의 득세,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등에 의해 시작된 바 있다(Kahneman and Renshon, 2007; Jervis, 1988). 또한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여타 국가가 핵 무장을 시도하는 핵 확산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1990년대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다(조선일보, 2015.7.2). 잘 관리된 핵 확산이 오히려 핵 전쟁을 억제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Mearsheimer, 1990), 핵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핵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agan and Waltz, 2003). 특히 동북아의 경우 이미 안보 딜레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 군비 경쟁에 돌입할 경우 안보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보유는 이른 바 ‘불량국가’(rogue state)나 테러집단의 핵 보유 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실제 북한에 의해 이들에게 핵무기 또는 핵물질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우선적 목표가 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확산 행위가 실현될 경우 군사적 선택을 비롯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황지환, 2014: 235).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중지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노력했지만, 사실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4년 1차 핵 위기를 겪으면서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미국 부시행정부(George W. Bush)의 등장과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02년 10월 합의가 파기되고 200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6자회담을 구성하고 2003년 8월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05년 9월 ‘9.19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타결의 조짐을 보였지만, 방코 텔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비밀자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9.19합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 6자회담을 통해 2.13합의와 10.3합의를 도출하였지만, 미국과 북한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중지되었다. 북한 핵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마지막으로 이룬 것은 2012년 미북간의 2.29합의지만, 보름 만에 파기되고 이후 북한은 2013년에 이어 2016년 1월과 9월에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무기의 실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핵심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이다. 2

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을 협상용이 아닌 보유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고, 2012년 북한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행태를 분석해 봐도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서 북한 핵의 동결, 신고·검증, 핵 폐기의 수순으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의 동결 선언만 수차례 이루어졌고 핵물질 신고와 검증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다. 핵 폐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북한 핵은 정권 유지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포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3월 이른 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는 “경제·핵 병진 노선”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하였다. 2016년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26년 만에 개최된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병진 노선을 재천명함으로써 결코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

## 5. 미중 패권 경쟁

동북아 안보환경은 미중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양국 관계의 협력이 증진될 경우 역내 안보환경의 안정적 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양국 관계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전술한 많은 갈등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 미중관계는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로서 이론적 성향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 미국과 중국은 특히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宋玉華와 王玉華, 2008; Ikenberry, 2008; Bergsten et al, 2006; Garrett, 2006; Brzezinski, 2005). 자유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적 협력 기제 등이 작동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둘째, 국제정치에서 현재까지 사실상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기능해 온 신현실주의 설명을 따르면 폭력을 수반한 미중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張繼業, 2008; Mearsheimer, 2005; Christensen, 2001; Bernstein and Bunro, 1997; Kristof, 1994; Roy, 1994).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고 개별국가는 자국의 안보 및 국익 추구를 극대화하여 항상 경쟁 상태에 있다고 전제하므로 중국의 부상에는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미중관계는 미국 우위의 세계

질서 하에서 부침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 상호작용을 지속한다는 것이다(袁鵬, 2008; 閻學通, 2008; Hills et al, 2007; Ross, 1999). 미국이 군사 및 경제력과 같은 전통적 측면에서의 힘의 우위와 더불어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와 국내정치의 안정성 등에서 중국을 앞서므로 미국 우위의 틀 안에서 미중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Nye, 2015; Shambaugh, 2013).

미중관계 전망은 쉽지 않지만, 현 미중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희’(韜光養晦, 은밀하게 힘을 기르다),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롭게 일어서다)를 거쳐 2012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 출범이래 ‘중국의 꿈’(中國夢)으로 대변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한다. 중국의 꿈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 구체화되면서 미국과 대등한 대국으로서 중국을 인정하라는 헤게모니 추구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미 달러화의 최대 보유국으로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상호 의존을 심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 온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진과 난사군도를 포함한 영토에 대한 공세적 태도 등에 대해 역내 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의 역할 확대를 위해 ‘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한미동맹과 미호주 동맹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기능한다. 냉전시절 경험하였던 진영 논리가 다시금 재현되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산재한 역내 갈등이 진영 사이의 세력 다툼으로 확장되고, 영토 갈등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III. 역내 갈등 해결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전술한 바와 같이 동북아 안보환경은 불안정하다. 배타적 민족주의, 영토 분쟁, 북핵, 미중의 패권경쟁 등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동북아의 평화, 협력, 공존 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라는 학문의 태동 자체가 전쟁 승리를 통한 패권의 완성이 아닌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현상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적론적 측면에서 분쟁을 완화하고 협력과 공존을 모색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방책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완화, 지역 협력을 위한 공동체 구성, 북한 비핵화 등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배타적 민족주의의 완화

동북아에 만연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민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없이 타민족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로마서 9:1-2).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은 민족 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하영조, 1998: 366).

따라서 동북아 안보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민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강화를 위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실 필요성은 로마서 15장의 예수님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로마서 15:8-9). 예수님은 민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배타적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으며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도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이다. 따라서 동북아에 만연한 국수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정치에 널리 통용되는 국가 이익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국제 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신현실주의는 국가의 최고 이익을 생존으로 규정한다. 세계 자체가 무정부 상태이므로 국가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자조(self-help)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안보 딜레마가 존재하므로 항상 생존을 국가의 최우선 이해로 삼아야 한다(Waltz, 2010).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전제를 수용하여 국가를 단위로 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강대국의 경우 자국의 정

치체제와 이념을 전파하고 물리적 영토를 확대하는 것이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세적 정책을 취한다. 비강대국도 배타적 영토 주권과 자국 중심의 역사적 해석 등을 통해 주변국을 경쟁 및 잠재적 분쟁국으로 전제하고 생존을 위한 조치를 국가 이익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 생존을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부분의 역내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안보 전략은 생존이라는 명분을 극대화하여 세력 확장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배타적 민족주의가 자국민만을 위하고 다른 민족(이방인)을 철저히 무시함에 도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족 부흥이라는 가치를 명분으로 생존의 필요성을 넘어선 공세적 국가 전략을 표출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민족주의를 성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우선 기독교인부터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감정과 정서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꾸준히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기반하므로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해 낼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가 배출하는 감정적·정서적 틀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은 각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다면 개별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수용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동북아에 팽배한 역사적 상처는 치유되고 극복되어야 하지만, 가해 민족의 통절한 반성이 없다고 이를 빌미로 다른 민족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핵심은 다음의 성경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할만한 자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누가 6:35). 이 말씀을 역사적 상처를 받은 민족의 입장에 적용하면 비록 가해 민족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 민족을 “모욕”하더라도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의 사랑이 어느 수준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가해 민족을 상대로 보복하거나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상호 모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3.1 운동으로 일체에 의해 학살당한 제암리

교회의 기념관에 있는 구호처럼 “잊지는 말되 용서하자”는 태도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 사랑 실천의 최소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개별 기독교인이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말씀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것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리스도인이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 각 나라의 정치인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동북아 역내의 민족주의는 정치 지도자가 국내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단기간에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외부의 위협, 특히 역사적 뿌리가 있는 민족 갈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와 나를 구분하여 타자를 적대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경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다”(갈 3:23),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 2:14) 등 화평과 하나 됨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활용하여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되며 공의로운 정부를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성찰을 통해 정치 지도자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을 직접적으로 고민하는 기독교 정치인, 관료, 학자 등은 국가 안보전략의 전제와 최종목표, 정책 실행 등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성찰을 해야 한다. 안보전략의 최종 목표인 국가의 생존은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부흥, 귀환, 영광의 재현 등을 추구하고 역내 헤게모니 쟁취를 목표로 하거나 역사적 잘못을 부인하면서 공세적 세력 확장을 추구하는 안보전략은 역내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해동포주의로 발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분명 ‘화평’이고 그리스도인은 “우주적이고 초국가적인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국수주의에 저항해야 한다(Marshall, 1997; 진웅희 역, 227-228).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세상적 영역으로 생각했던 국가안보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명확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각국의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되 배타성을 초월하여 갈등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민족의 그리스도인과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정치와 국가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서로 간의 잦은 교류를 통해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



면, 한국과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각국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서로간의 차이가 기독교인 간에도 존재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간격을 줄여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점차 확장되어 상호간의 말씀에 근거한 공감대가 확장된다면 상처가 치유되고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 정치학자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지성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독 정치학자가 모국과 세계를 동시에 품기 위해서는 세계정치의 흐름과 역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고, 수많은 국제정치의 의제와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해석과 이해를 끊임없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시행 가능한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충분히 세사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민족 갈등을 넘어서 상호 공존과 평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 평화협력 공동체 구성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평화적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시발점이 된다면, 지역 평화협력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일보 진전된 보다 적극적 형태의 평화 추구 노력이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즉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 중지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의미와 함께 무력 분쟁이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건설하는 적극적 개념을 포함한다(Blue Letter Bible).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성경도 끊임없이 전쟁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Marshall, 1997; 진웅희 역, 249). 이사야는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 하리라”고 예언한다(이사야 4:4).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공동체 구상이 ‘신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하영선, 2008: 31) 국가 주권을 넘어선 공동체 구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국가 주

권 개념은 기독교적 성찰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국가 주권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 시발점이다. 국가 주권은 지도자[정부]가 국가를 통치하고, 외교와 국방에 책임을 지며, 타국은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 개념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유럽의 강대국은 비강대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침략과 전쟁을 지속하였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주권 침탈의 정점을 이룬 후 현재까지도 여러 형태로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는 국가 주권을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이라고 주장한다(Krasner, 1999).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도 국가 주권은 문제가 있다. 우선 주권은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가 주권이라는 최종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주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주권을 명분으로 편협한 자국의 이해만 추구하거나, 권위주의 체제 국가가 통치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상황에서도 주권을 내세워 타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개인과 집단, 나아가 국가를 망론하고 공동선(common good)의 추구를 의미한다. 공동선의 기본 개념은 십계명을 요약한 다음의 두 계명에서 찾을 수 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6-40). 공동선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경우 ‘공생의 추구’를 의미한다(Wallis, 2013).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국가 주권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공동체의 권리, 이익, 자유, 행복 등의 공동선을 공생을 위해 추구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세계정치에 적용할 경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국가들은 주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근 국가들과 제휴하여 그들의 주권을 보다 큰 목표인 공동선의 실천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약과 국제법 등이 필요하고 이는 분쟁 방지에 대한 “기독교적 반응의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Marshall, 1997; 진웅희 역, 241).

따라서 동북아에 만연한 영토분쟁, 군비경쟁, 패권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노력과 함께 역내 국가간 협력을 제도화할 기제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협력체 구상이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신화’와 ‘맹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현실이다(조동준, 2015: 237). 현재 동북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협력체제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협력사무소(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만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배제되었고, 동북아에 위치하지 않지만 역사적·정치적으로 사실상 동북아에 함께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미국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소’로 국한되어 있다. 보다 심도 있는 의제와 특히 안보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조직체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3국 협력사무소의 핵심적 행사인 삼국 정상회의가 2013년 이후 열리지 못하다가 2015년 11월 3년 만에 한국에서 재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의체가 있지만, 제한된 의제만을 다루는 한시적 기제이고 그나마 2008년 이래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동북아를 포함한 확대된 지역을 포괄하는 기구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확대장관회의, 아세안 지역포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이 있지만, 실질적 통합을 지향하거나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고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협력체 구상에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다자 안보 협력 기제 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양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북아 국가관계는 양자간의 패권 경쟁, 역사 인식 등의 복잡한 역사·정치적 역동이 얽혀 있어서 양자간 관계가 안정·발전되는 것이 다자간 협력체 구성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다자간 협력에 비해 오히려 양자 간의 대화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양태를 보이는 것도 이를 통한 다자간 발전의 가능성을 구상하게 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동북아내 다자 협력체 구성이 어려운 것은 양자관계의 역사적 갈등이 숙적관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운 대립관계,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간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역사 갈등, 패권 경쟁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간의 극한 대립 등의 양

자관계가 다자간의 협력을 저해한다. 따라서 다자간 협의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관계의 양금을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복합적 다자체제 구성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다자체제는 역내 국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는 다양한 전근대, 근대, 현대의 숙제들이 영토 분쟁, 분단 문제, 패권 경쟁, 역사적 양금 등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보통의 방법으로 지역 협력체 구성이 어렵다. 따라서 틀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다자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묶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하영선·김상배 편, 2010). 예를 들면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맹 네트워크를 중국이 이끌고 있는 협력체와 연계하여 새로운 복합관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을 봉쇄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아닌 중국과 공존하고 평화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한국은 미일과의 협력과 중국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냉전의 오래된 적대·봉쇄정책을 평화·공존 정책으로 바꾸는 데 한국이 기여하여 동북아 국가의 평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평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의제 보다 덜 민감한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지역협력체에 한국이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개발협력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중국에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업하고 가능하면 통합하도록 한국이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3. 북한 핵억제 및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비 경쟁이 중단되고 나아가 군비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역내 안보 환경 불안정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므로 즉시 중단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핵 및 핵 반환산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기독교 해석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는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정전론)의 두 전통으로 양분되어 발전되었다. 평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전쟁 자체를 죄악시 한다(박명철, 2011:

98; 신원하, 2003: 133, 135). 예수님이 주창한 것은 보복과 폭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 용서로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마 5:39)와 같은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정전론은 정의 없이는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전쟁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평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에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조건을 통해 전쟁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론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을 전쟁을 통해 물리치시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출 15:1-18; 신 20:14-15; 신 20:17; 사 10:5-11; 사 63:10; 렘 21:4-5; Regan, 2013: 9).

평화주의와 정전론의 두 전통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 축소와 특히 핵억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다. 평화주의자는 어떤 종류의 무력 사용도 반대하므로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핵무기 감축과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주장한다. 필요하다면 일방적인 핵무기 폐기 선언도 지지 한다. 반면 정전론의 전통을 따르는 학자들은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핵을 통한 응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무차별적 핵전쟁을 막기 위해 핵은 반드시 방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보다 정교한 체계와 수단을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평화주의에 기반한 핵무장 억제와 정전론에서 출발한 핵 억지론은 둘 다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비판적 평가도 적지 않다. 우선 평화주의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일방적 핵무장 포기는 상대국의 공격 의지를 증진시켜 공세적 정책을 통한 세력 확장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핵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핵 억지론은 확전을 통해 결국 본격적인 핵전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쟁이 시작되면 사실상 정전론이 제시하는 기준을 엄격히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다(신원하, 2003: 145-150). 두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3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핵 평화주의다. 월터 스타인(Walter Stein)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가 제시한 핵 평화주의는 핵을 보유하되 억제를 위한 위협용이고 실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tout, 1991). 그러나 핵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한다면 핵을 선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핵으로 보복 당한다는 이른 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핵 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북한이 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소형화, 다중화, 대량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억제 전략 대안은 많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따른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핵우산은 한국이 북한에 의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을 사용하여 북한에게 보복하는 형태로 작동한다. 따라서 현 한국의 핵 대응 전략은 핵을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정전론에 기반한 핵 억지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실제 핵 사용의 주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서 막강한 핵 능력을 가진 미국이 북한의 한국 핵 공격시 핵 보복을 천명하여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 해제를 주장하는 평화주의나 핵을 보유하되 사용하지 않는 핵 평화주의를 전략적 대안으로 선택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현 상황에 적용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도 북한 체제의 일인 지배 특성과 공세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다. 따라서 한국은 정전론에 기반한 핵 억지론을 대북 핵억제의 기본 전략으로 유지하되 이를 보다 정교화 하여 정전론의 기준에 엄격히 맞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핵무기가 아닌 정밀 타격 무기의 개발 및 보유가 불가피하다. 북한과 같이 정책 결정에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핵 보복 공격은 대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므로 정당성 측면에서 더욱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Laqueur, 1987: 149).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은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지도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여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핵무기만큼 파괴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북한 주민보다 정권 안보를 우선시하는 북한 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정밀 타격 무기는 북한 지도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밀 타격 무기는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정전론이 규정한 민간인 공격 배제와 최소한의 무력 사용 등의 원칙에 부합된다(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1985: 46). 정밀 타격 무기는 핵무기와 같이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는 무기가 아닌 특정 목표물만을 공격하므로 필요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초 핵 공격을 억제하거나 2차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둘째,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체제의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핵 전쟁에 대한 기본적 억제의 작동 원리는 이른 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이다. 상대국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더라도 반격할 수 있

는 핵 능력을 비축하여 보복함으로써 결국 상호 공멸한다는 위협의 균형을 통해 핵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다. 반면 미사일 방어는 상대방의 핵 공격을 방어함으로써 핵 사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는 타국의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주요 군사시설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것이 아닌 적대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격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 살상 준비를 통해 핵전쟁을 억제하는 MAD와 살상에 대한 위협 없이 방어를 목표로 하는 MD 중 후자가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한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제가 보다 완전한 형태로 구축될 경우 핵무기 감축 협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전과 같이 반격을 위한 2차 공격 능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핵무기 감축이 가능해진다. MD를 구축한 국가가 여전히 공격용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특히 공세적 확장을 모색하는 국가일 경우 오히려 방어체제 구축을 통한 공격을 추구할 수 있지만(Waltz, 2013: 465), MAD 체제에 비해 핵무기 감축이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직접 연계되지는 않으므로 감축을 위한 전제는 마련된다. 일부에서는 MD 구축이 오히려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MD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량화하여 MAD가 부과하는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Labarre, 1995: 56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국가의 의도 또는 국가 지도자에 달려있다(Tucker, 1984: 7). MAD 체제하에서도 핵보유국들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 다중화 하였다. 경우의 수로 따져도 적어도 MD를 구축한 국가의 경우 핵무기의 대량화의 필요성은 줄어들므로 핵 감축 협상에 나설 여지가 MAD 체제에 비해 높아진다. 따라서 MD와 MAD 체제를 폭력과 파괴 대(對) 방어와 군축의 가능성 차원에서 비교한다면 MD를 통해 후자의 성취 가능성이 높으므로 MD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D의 실제 구축과 관련해서 체제의 완성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창과 방패의 싸움 중 방패에 해당되는 MD가 어느 정도 창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미 고도로 발달된 핵무기, 특히 다탄두가 장착된 핵무기의 경우 MD 체제가 완전히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MD 체계 구축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MAD가 부과하는 불안정성 보다는 MD의 기술력의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MD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한 바 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MD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MD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독자 핵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에 대한 억제를 감당하는 미국이 MAD 체제에서 MD 체제로의 변환을 추진하므로 한국이 이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미국의 아시아 지역 MD 체계 구축이 북한의 핵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 MD 체제 가입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더불어 MAD에 비해 MD는 방어적 성격이므로 정전론의 입장에서도 나은 선택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MAD에 기반한 2차 공격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선제공격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있다. 한국, 미국 또는 한미 연합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없지만, 전쟁의 원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오인에 따른 선제공격의 필요성이 북한에게 대두될 때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어차피 미국의 핵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오인할 경우 2차 대응 능력이 없으므로 북한은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MD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한국, 일본, 혹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 미사일을 MAD에 기초하여 2차 공격을 통한 북한의 궤멸로 억제하는 것보다 MD를 통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핵의 상호 공격을 막는 것이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우월한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MD는 실수 혹은 사고로 인한 핵 공격을 막는 역할도 수행한다. 핵무기가 개발된 이래 최소한 40차례이상의 핵 미사일이 실수로 발사될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Labarre, 1995: 562).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MD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무장 저지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앞서 제시한 정밀타격무기의 개발과 MD 체제 편입 등은 핵억제를 위한 선택이므로 근본적 해결책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이를 다루는 기제가 필요하다. 핵억제를 위한 노력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연계될 때 보다 큰 정당성이 부여된다. 정밀타격무기의 개발 및 배치, MD 체제 편입 등은 핵억제를 위한 효과적이고 긍정적 조치임에도 국가의 의도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1980년대 레이건(Ronald Reagan) 당시 미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시도 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전론의 입장에서 핵억제를 위한 노력은 대화와 병행될 때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1985: 45).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주도의 대북제재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대화와 협상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과 이에 상응하는 행보



가 없다면 대화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거나, 혹은 핵동결만을 선포하고 중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 포기의 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시되지만, 한국은 핵억지 정책의 정당성 강화, 북한의 전술적 변화에 대한 대응,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대화 준비는 필요하다.

#### IV. 결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불안정하다. 경제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있고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이 증대하고 있지만, 안보 문제만큼은 여전히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역내 모든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해결되지 않은 국가간 역사적 앙금은 상호 신뢰를 저해하여 세계 어떤 지역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역내 국가는 단순히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체계와 방어적 군사 전략보다는 영향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보다 공세적 전략을 바탕으로 무장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100여 년간 국민 국가간 전쟁의 원인이 된 유럽의 사례와 같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간 영토 갈등이 산재한다. 영토 갈등은 역내 만연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타협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무력 충돌로 이어지기 쉽다. 이외에도 역내 안보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북한의 핵 무장이 지속되고 있다. 핵무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단순히 군사 차원에서 벗어나 국제정치 역학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동북아의 핵심적인 안보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기능한다. 예를 들면, 비핵화 노력이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핵 비무장 역내 국가의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충돌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동북아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양국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동북아의 다양한 안보의제와 부정적으로 결합되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타적 민족주의를 완화해야 한다. 성경 말씀은 민족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기 민족만을 우선시하고 타민족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전 인류의 구원이므로 편협하게 정의되는 민족적 이해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민족주의가 부과하는 감정적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 각국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각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하되 이를 품을 수 있도록 다른 국가의 기독교인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인식을 확인하고 말씀에 비추어 공감대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역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동북아의 다자협력체제, 특히 안보 분야의 협력은 국가 간의 뿌리 깊은 역사적 갈등과 미중간의 패권 경쟁, 북한 핵 개발 등으로 인하여 구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보다 적극적인 평화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 체제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으로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다자체제를 설립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억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군사 긴장 완화에 대한 다양한 기독교적 성찰 중 북한이 이미 핵 무장을 시작한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은 정전론에 기초한 핵 억지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상호 대량살상을 통한 핵 억지를 모색하는 기존 국제정치의 논리와 차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전론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일인 권위주의 체제임을 감안할 때 북한 권력과 무관한 대다수 민간인을 불모로 하는 핵 억지론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따라서 핵무기가 아닌 정밀 무기 체계를 개발하여 특정 목표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핵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격 보다는 방어에 치중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핵 억제를 위한 군사적 방안은 타협을 모색하는 대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동북아 역내의 안보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더욱 치열하게 사고해야 한다. 기존 학문이 분석해 내는 안보 갈등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기독교 지성을 갖고 면밀히 고찰하여 통합을 이루어내는 작업을 수

행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대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준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국제관계 지성의 끊임없는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추동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15.7.30일자. “천궁 양산을 계기로 본 한국 미사일 체계.”  
국방백서 2014. 대한민국국방부.
- 김준섭 (2015). “박근혜정부의 대일외교와 한일관계.” 2015 한국세계지역학회 추계 학술회의 발표문.
- 김태호 (2015). 『동아시아 주요 해양 분쟁과 중국의 군사력』. 서울: 해양전략연구소.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팀 (2014).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서울: 오름.
- 박근혜 (2013).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문 전문.”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view\\_mode\]=detail&srh\[seq\]=139](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view_mode]=detail&srh[seq]=139). (검색일 2015.11.22)
- 박명철 (2011). 『현대 사회의 윤리적 이슈들』.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원곤 (2016). “정당한 전쟁론 연구: 평화주의, 현실주의와의 비교.” 『신앙과 학문』. 21(2). 57-88.
- 신원하 (2003). 『전쟁과 정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명찬 (2013).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일본의 대응.” 고봉준 외 (2013).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조동준 (2014). “동아시아의 역내문제 해결방식의 특수.” 『세계정치』. 21. 207-246.
- 코리아 헤럴드 2015.7.26일자. “N.K. rocket threats escalate.”
- 하도형 (2013). “다오위다오 분쟁 격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고봉준 외 (2013).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하영선 편 (20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억제, 관여, 신뢰의 복합 추진』.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_\_\_\_\_ (2008).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하영선 (2015). “복합화 시대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 EAI 하영선 칼럼.
- 하영선·김상배 편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하용조 (1998). 『로마서의 비전』. 서울: 두란노.
- 한국 무역협회 통계자료 (2015).
- 황지환 (2014). “북한의 핵정책.” 체제통합연구회 편 (2014). 『북한이 체제와 정책』. 서울: 명인문화사.
- 張繼業 (2008). “美國對華軍事政策的變化趨勢.” 現代國際關係 第3期.
- 袁鵬 (2008). “戰略互信與戰略穩定 - 當前中美關係面臨的主要任務.” 現代國際關係

第1期.

- 閻學通 (2008). “中美軟實力比較.” 現代國際關係 第1期.
- 宋玉華·王玉華 (2008). “中美經濟融合與戰略經濟對話.” 國際問題研究 第2期.
- Allen, J. (2014). *War: A Primer for Christian*. Texas A&M University Press.
- Allison, G. (2014). “2014: Good Year for a Great War?.” *National Interest* 1(January).
- Baer, H. D. (2015). *Recovering Christian Realism: Just War Theory as a Political Ethic*. Maryland: Lexington Books.
- Bergsten, C. F. Gill, B. Lardy, N. R. and Mitchell, D. (2006). *China: The Balance Sheet*. New York: Public Affairs.
- Berstein, R. and Bunro, R. (1997).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76(2).
- Breuilly, J. (2014). “Nationalism.” in Baylis, J., et el (2014).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Press.
- Brzezinski, Z. (2005). “Clash of Titans.” *Foreign Policy* 146(Jan/Feb).
- Christensen, T. J. (2001). “Posing Problems without Catching up; China’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5(4).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1999). *Japan and Russia in Northeast Asia: Partners in the 21st Century*. Greenwood Publishing Group.
- Garrett, B. (2006). “US-China Relation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error: a framework for analysi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5(48).
- Hills, C. A. Blair, Dennis C. and Jannuzi, F. S. (2007). *US-China Relations: An Affirmative Agenda, A Responsible Cours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Holmes, A. F. (2005). *War and Christian Ethic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Hunter, J. D. (2010). *To Change the World*. 배덕만 역 (2014).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 Ikenberry, J. G. (2008).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 Jervis, R.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 \_\_\_\_\_ (1988). “War and Misperception.”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8.
- Kahneman, D. and Renshon, J. (2007). “Why Hawks Win.” *Foreign Policy*

- 158(January-February). 34-48.
- KBS News 2016.6.15.일자. “서방사 창설 5주년 위기조치 훈련 실시.”
- Krasner, S. D. (1999).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istof, N. (1994).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72(6).
- Kubalkova, V. (2000). “Towards a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log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9(3). 675-715.
- Labarre, F. (2005). “Is Missile Defense Moral?.” *International Journal* 60(2). 553-573.
- Laqueur, W. (1987). *The Age of Terrorism*. Boston: Little Brown.
- Luoma-aho, M. (2012). *God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Marshall, P. (1997). *Just Politics: A Christian Framework for Getting Behind Issues*. 진웅희 역 (1997). 『정의로운 정치: 기독교 정치 사상과 현실 정치』. 서울: IVP.
- Mearsheimer, J. (1990).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The Atlantic* November.
- \_\_\_\_\_ (2005). “Better to Be Godzilla than Bambi.” *Foreign Policy* 146(Jan/Feb).
- Monsma, S. (2008). *Healing for A Broken World: Christian Perspectives on Public Policy*. Wheaton: Crossway Books.
- Mousseau, M. (2013). “The Democratic Peace Unraveled: It’s the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7. 180-197.
-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Nuclear Strategy and the Challenge of Peace” in Kegley. C. W. and Wittkopf. E. R. (Eds.) (1985). *The Nuclear Reader: Strategy, Weapons,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 News Japan. March 26. 2015. “Umiji largest destroyer “Izumo” commissioned helicopter equipped with capacity 9 aircraft.”
- New York Times. Jan. 23, 2014. “Japan’s Leader Compares Strain With China to Germany and Britain in 1914.”
- Nye, J. (2015).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ty Press.
- Patterson, E. (2007). *Just War Thinking*. MD: Lexington Books.
- Regan, R. J. (2013). *Just War: Principles and Cases*.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Press.

- Ross, R. S. (1999).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23(4).
- Roy, D. (1994).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9(1).
- Sagan, S. and Waltz, K. (2003).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W. W. Norton & Company.
- Shambaugh, D. (2013). *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Sider, R. (2012). *Just Politics: A Guide for Christian Engagement*.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181-190.
- Stout, J. (1991). "Ramsey and Others on Nuclear Ethics." *Th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9(2).
- The Diplomat June 07, 2016. "Top US Officer visits US Aircraft Carrier in South China Sea."
- Tucker, R. W. (1984). "The Nuclear Debate." *Foreign Affairs* Fall.
- Voice of America 2016.4.26. "한국 국방장관 '북한 핵 개발, 대한민국 겨냥'."
- Voice of America 2015.9.12. "한국군, 북한 전역 타격 800km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 단계."
- Wall Street Journal. April 27, 2013. "One Man's Invasion Is."
- Wallis, J. (2013). *On God's Side*. Grand Rapid: Baker Publishing Group.
- Walzer, M. (1997).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NewYork: Basic Books.
- \_\_\_\_\_ (2004). *Arguing About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altz, K. N. (1981).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in Betts, R. K. (2013). *Conflict After the Cold War*. New Jersey: Pearson.
- \_\_\_\_\_ (2010).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Waveland Print.
- Washington Post. April 26, 2013. "Shinzo Abe's inability to face history."
- Yoder, J. (1994). *The Politics of Jesu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Zakaria, F. (2008). *The Post-American World*. W. W. Norton and Company.
- Blue Letter Bible, <https://www.blueletterbible.org/lang/lexicon/lexicon.cfm?Strongsh=H07965&Version=kjv>. (검색일 2015.11.29)
- Operation World. (2016). <http://www.operationworld.org/glossary>. (검색일 2016.8.16)

-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Fact Sheet (2016).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military\\_expenditures](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military_expenditures). (검색일 2016.7.2)
-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2015). [http://www.mod.go.jp/e/d\\_act/anpo/](http://www.mod.go.jp/e/d_act/anpo/). (검색일 2015.11.28)
- Tirone, J. and Donahue P. (2014) “Kissinger Says Asia Is Like 19th - Century Europe on Use of Force.” *BollbergBusiness* (Feb).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02-02/kissinger-says-asia-is-like-19th-century-europe-on-use-of-force>. (검색일 2015.11.29)
-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DP.pdf>. (검색일 2016.7.2)



## Abstract

# Christian Perspectives on Security Environment and Possibility of Peace in Northeast Asia

Won-Gon Park (Handong Global University)

In spite of the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remains unstable. China has been in a constant struggle of conflict and cooperation with the US.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6 shows no indication of giving up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s. Various kinds of territorial disputes are also rampant. Although there have been extensive analys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resolve the grave security threats in Northeast Asia, only a few are founded upon the Christian world view.

This paper has attempted to first assess the security challenges in Northeast Asia by categorizing them into nationalism, arms race, territorial disputes,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and US-China hegemonic struggle. The paper then proposes thre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Christian perspective. The first recommendation is to reduce nationalism in Northeast Asia. Jesus's mission and purpose of salvation for all nations extended beyond the narrow constraints of national identity. Thus it is crucial to consider an approach that respects the unique identity of nations, yet overcomes the barriers established by nationalism. Second, despite criticisms that a multilateral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is a "myth," God's sovereignty is above the sovereignty of the states, and therefore active efforts to establish a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in the region to achieve cooperation for peace is necessary. Lastly, in order to bring upon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velop a nuclear deterrence strategy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just war tradition, but to renew its efforts to promote dialogue with the North and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In order to overcome conflict and confrontation and achieve peace and

security, it is imperative that there is a consta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und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upon which active policy enforcement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Northeast Asia, security, North Korea nuclear weapon, nationalism, territorial disputes